	보도자료	(배포) 2018.11.8.(목)
보도일시	2018.11.9.(금) 행사종료 후 (11시 30분)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팀 장 이준헌 (044-200-4311) 사무관 구태모 (044-200-4312) 사무관 김진업 (044-200-4313)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 장 명한석 (02-2110-3629) 서기관 이규철 (02-2110-3256)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 장 서기웅 (044-203-4380) 사무관 허정민 (044-203-438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 장 최경일 (044-202-3650) 사무관 임현규 (044-202-3658)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과 장 손후근 (042-481-8957) 서기관 임상규 (042-481-4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과 장 신진창 (02-2100-2830) 사무관 최범석 (02-2100-2833)

"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1 행사 개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

○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세부 행사내용은 붙임1 참조)

<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요 >

▪ **일시** : '18.11.9.(금) 10:00~11:30

▪ **장소** :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 및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 **주요 프로그램**

[1부]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발표
- 상생협력 사례 영상 시청 및 토크 콘서트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2 공정경제의 의의

□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정책**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정경제 **핵심 3요소**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늘 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 CEO 등 **주요 정책고객** 41명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들**(3)이 참석하여 공정경제 **정책 체감사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3 행사 내용

□ 오늘 행사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안희규)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 (공정위, '17.12월)

○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와 **점주**(박효순)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공정위, '18.1월·'18.4월)

–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2부>**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

①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18.11월)

* **[예시]** ①(개점단계)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②(운영단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③(폐점단계)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②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18.11월)

*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③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중기부, '18년 도입 및 '19년 확대 추진)

* 대기업 멘토링 성과 : 생산성 증가 28.3%↑,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④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 '19년)

–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19.1분기 입법예고)

*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 붙임: 1. 행사 주요 프로그램
2.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붙임1 행사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내용		비고
개회	10:00~	개회선언, 국민의례 (3') 등		(진행 : 손정은)
무대정리(2')				
<1부> **성과 및 계획** **(공개)**	10:10~	**1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진행 : 손정은)
		성과 및 계획 (10')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갑을문제 해소 · 상생협력 강화 ·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위원장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상생사례 (30')	· 영상 : 상생협력 사례(2')	
			· 토크 콘서트(28') - 납품단가 조정 사례(이마트-납품업체) - 가맹비 인하 사례(빽다방 가맹본부-가맹점)	안희규(대한웰빙은박) 이갑수(이마트대표) 박효순(빽다방 점주) 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
사진촬영, 무대정리, 영상 (7')				
<2부> **전략 토의** **(사후공개)**	11:00~	**2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진행 : 경제수석)
		· 국민체감형 공정경제 과제 등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지정토론> 박용만(대한상의) 손경식(경총) 김영주(무역협회) 박성택(중기중앙회) 강정화(소단협) 장용성(금융투자자보호재단)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붙임2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요성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대기업집단 관련 주요사건 처리실적 >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 ('18.1.15.)	과징금(107억원), 검찰고발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 ('18.4.3.)	과징금(29.9억원), 검찰고발
	「엘에스」의 부당지원 행위 ('18.6.18.)	과징금(260억원), 검찰고발
	舊「동부」의 부당지원 행위 ('18.9.21.)	과징금(4.9억원)
지주회사 규정 위반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정 위반 ('18.21.)	과징금(29억원)
대기업집단 정책 절차규정 위반	「부영」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17.6.16.)	검찰고발
	「부영」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공시 ('18.3.14.)	과태료(32백만원), 검찰고발
	「한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18.8.13.)	검찰고발

○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를 유도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 : 282개('17.9월) → 36개('18.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 : 93개('17.9월) → 5개('18.9월)

○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복지부, '18.7월)하고,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금융위, '18.7월)하고 있다.

*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집중위험·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 **(향후계획)**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11월말 국회제출 예정)」, 「**상법**(상임위 계류중)」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 설명 및 이해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2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주요성과)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 '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
③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대규모유통업법['18.10월]) 등

**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있은 날로부터 3년 → 5년)
②벌금(부당이익금 2~5배 → 3~5배) 등 형벌 수준 강화 (자본시장법, '18.3월)

○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 불공정거래 관행 등 개선 현황 >

- 乙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	-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
◇ **하도급** o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 5.1%p ↓ (7.3% → 2.2%) o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 4.8%p ↓ (58.5% → 62.3%)	◇ **하도급** o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하도급대금에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o (SK하이닉스 자사 임직원 임금 상승분의 20%를 협력사 처우 개선에 지원(임금 공유제)
◇ **가맹** o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 12%p ↓ (27.5% → 15.5%) o 계약해지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부담한 위약금 평균 금액: 562만원(36%) ↓ (1,582만원 → 1,020만원)	◇ **가맹** o (파리바게뜨) 구입강제품목 수 13% ↓ (3,197→2,771개) o (GS25) 최저수익 보장규모 확대 (연 6천 → 9천만원 등)
◇ **유통** o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률: 6.8%p ↑ (74.1% → 80.9%) o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 1.6%p ↓(2.5% → 0.9%)	◇ **유통** o (CJ오쇼핑) 납품업체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시중 금리보다 약 2%p 우대) o (이마트) PB상품 매장에 中企제품 비중 70% 이상 유지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17) - 전년대비 거래관행 개선 정도

○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되었다.

□ **(향후계획)** 가맹점 및 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및 자본시장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가맹점주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신고제 도입)하고, 판촉행사 시 본사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 강화 추진(가맹법, 상임위 계류중)

3 상생협력 강화

□ **(주요성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정책방식(넛지 방식)을 적용**하여,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
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프로그램 도입('18) : 생산성 28.3% 증가, 불량률 40.4% 감소
⇒ (사례) 화진산업, 일일 생산량 100% 향상, 납기일 2일 단축
② 대기업 등의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신설('18) : 삼성 C-lab, 현대차 제로원 등 40개사 도입
③ 상생형 R&D : 대기업 등 69개 투자기업과 6,440억원 조성 → 과제당 매출 21.2억↑
④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1,600억원) : 금융권 최초 모펀드 조성(하나은행 1,100억원) 등

◇ 민간중심의 개방형 상생혁신
① 롯데엑셀러레이터 : 6개월 단위의 L-Camp 진행, 68개사 지원 및 육성(1~3기 고용 53%↑)
② 한화드림플러스 :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총 144억원 투자유치 달성)
③ 상생결제 : 이용액이 전년동기 대비 16.4% 증가, 1→2차 결제 비중이 30.8%↑, 3→4차 도입 사례도 등장
④ 대·중기간 '임금격차 해소운동' : 삼성, 현대차, SK, LG 등 약 6조원 지원

○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 기술탈취 예방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① 범부처, 지역별 기술보호 추진체계 구축 및 기술탈취 대책 마련 : 대책도움 41.9%('18.9)
② 유통3사 자체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최초 직권조사('18.7)
③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14→29개) : 부당단가인하 경험업체 작년대비 감소(14.3→12.1%, '18.4)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6),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 5→10년('18.9, 상가임대차법)
② 정부지원 혜택 확대를 위해 상점가 기준완화 : 50→30개 점포이상('18.1, 유통산업법)

□ **(향후계획)** 대·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법, 상임위 계류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이익을 자율적 사전 계약에 따라 공유,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 또한, 피해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술탈취, 납품단가는 끝까지 해결**할 계획이다.

4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주요성과)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갑을문제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공정위, '18.3월)했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시행(공정위, '18.5월)했다.

*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 및 서울·경기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18.11월)
** 조사·심의과정에서의 신고인 의견진술기회 보장,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 등

○ 보고의무 신설* 및 이행확보 수단** 마련 등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기구*****로 격상**했다.

* 외국에서 리콜 발생시 사업자는 결함정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소비자기본법, '17.10월)
** 소비자원의 리콜권고에 대해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불이행시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리콜 요청(소비자기본법, '18.3월)
***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 → 국무총리로 격상(소비자기본법, '17.10월)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강화**를 위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관행·제도 개선 추진
- ㅇ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18.4월)
- ㅇ 모바일·병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 시연('18.7월)
- ㅇ 저축은행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18.10월) 등

◇ 장애인·고령층·청소년층 등의 편의제고 및 권익 향상
- ㅇ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18.4월)
- ㅇ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18.4월)
- ㅇ 중학생 체크카드 발급 확대('18.8월~) 및 중·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 추진('19년 예정) 등

□ **(향후과제)**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1월 국회제출 예정)과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상임위 계류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①제조물책임, ②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③부당 표시·광고행위, ④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⑤개인정보 유출 피해, ⑥위해식품, ⑦금융투자상품 관련 집단소송제 확대